



# 안보전략논단

www.korva.or.kr

| 발행인: 신상태 | 편집인: 이화수 |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34('23-12) | 2023. 12. 1

제대군인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제언  
박용환

드론 공격 양상에 대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이종섭

한국 병역제도에 관한 단상  
홍성표

## 제대군인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제언

박 용 환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동국대 교수)

군인은 일반사회와 분리된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국가안보만을 생각하며 생활하는 특수집단이다. 이들 중 일부는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원해 장기 복무를 선택하지만 군 조직의 피라미드 계급구조의 특성과 다른 직업군에서는 보기 어려운 계급정년이라는 원하지 않는 퇴직제도에 의해 군을 떠나야만 하는 군인들이 있다. 즉 안정된 직업으로서의 보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제대군인들은 전역 시점 및 전역 후에 주거마련, 자녀 교육비, 기타 생활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기준 제대군인의 자가 주택 보유율은 33.4%로 일반 국민 평균 61.1%, 국가공무원 64.1%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은 군을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군인에게는 달갑지 않은 수치일 것이다. 따라서 전역을 앞둔 직업군인들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군은 그 동안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하는 제대군인들에 대해 안정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지원 정책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제대군인 취업률은 53.2% 밖에 되지 않고 있다. 선진국들의 제대군인 취업률이 평균 90% 이상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매우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또 취업을 하더라도 약 50%가 3년 안에 퇴직하고 있다. 퇴직자 중 35% 이상이 전직을 이유로 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제대군인들이 이와 같이 취업률이 저조하고, 또 취업이 되더라도 조기에 퇴직하는 것은 높은 연령과 민간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 경력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뽑히고 있다. 따라서 제대군인이 군 관련 직종을 떠나 순수 민간분야에 재취업해 생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

한편, 선진국들은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취업지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참전·상이군인 또는 2년 이상 군복무한 제대군인 및 그 피부양자에게 ‘제대군인부’가 주축이 되어 취업 및 창업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참전·상이군인, 제대군인 및 그 유가족에게 제대군인부가 제공하는 직업훈련·교육, 구직활동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등 다양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참전·상이군인, 제대군인 및 그 유가족의 개인적 능력을 감안하여 소득활동 능력을 유지, 회복하고 최대한 오랫동안 직업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선진국들이 이와 같이 제대군인 및 그 가족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는 것은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제대군인들이 조기에 사회에 적응해 보다 안정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제대군인에 대한 경제활동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국방관련 직종을 제외한 순수 민간분야에 대한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사실상 저조한 편이다.

제대군인들의 경제활동을 위한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제대군인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국방부는 국방전직교육원의 편성 및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제대군인 지원정책 및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고, 국가보훈부의 제대군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부처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원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현재 군에서 전역을 앞둔 직업군인들에 대해 복무기간에 따라 일정하게 주어지는 취업준비시간(전역전직업보도반교육)도 각 개인에게 위임할 것이 아니라 중앙통제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즉 통제부서에서 전문직업학교와 연계하여 개인별 희망과정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이것이 취업과 연계되는 결과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대군인들의 재취업을 위해 군내 활용 직위를 더 많이 늘리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군내에 계약직 공무원, 군내 용역관, 비상계획관, 안보협력관, 특수경비 등의 직종에 대해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제대군인들이 취업직위를 더 늘려나가야 한다. 사실 군인출신이 제일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일은 군 관련 직종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대군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군대 내에 현역전환직위를 늘리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즉 비전투분야(행정병과·기술병과)에 대한 직위는 현역을 과감히 축소하고 그 자리를 제대군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그 분들의 오랜 군 경험과 노하우, 업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군에서의 그 효용가치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5년 이상 군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신설된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는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민간 기업에 대한 제대군인의 취업직위를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제대군인의 전역 후 경제활동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직업군인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는 차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역 군인의 사기 증진과 사회에 필요한 인력 확보 측면 등을 고려한다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제대군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제도개선에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 드론 공격 양상에 대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이 종 섭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동국대 연구교수)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과 10월 7일 하마스-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벌어진 전쟁 양상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관점에서 과연 북한에서의 도발 수단으로 드론을 활용한 초기 전투에서의 대응 방안에 대해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전쟁에서의 4IR 기술을 적용한 “4IR 플랫폼”으로 상대방에 대한 공격 개시 시간이 대폭적으로 단축되고 방어하는 쪽에 정확하게 공격 목표물들을 자폭드론으로 타격함으로써 초정밀 최악의 사상자들을 최대로 발생시키고 있다. 적의 위치를 확인한 뒤 주변에 있는 야포와 미사일, 전투용 드론 등 아군 무기 중 가장 적합한 최적의 공격 수단 중에서 최적화 알고리즘을 활용한 우버 앱과 비슷한 방식으로 한 공격 성공에 대응 수단은 없을 것인가?

10월 7일 테러공격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경악할 만한 ‘기습적 대참사’였지만, 로텐버그 같은 이스라엘군(IDF) 초병들이 보기에 ‘알아크사 홍수(AI Aqsa Flood)’ 작전은 이미 철저한 예행연습을 거친 작품이었다. 테러공격 불과 1주일 전에도 매우 이상한 모습이 관찰 되었는데, 온갖 차림의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지도를 들고 발자국을 세고 땅을 파고 있었다고 한다. 로텐버그를 비롯한 초병들이 지휘관에게 경고했지만, 기껏해야 팔레스타인 농부들에 불과하고 별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묵살되었다. 이 지휘관의 정보 판단 미스는 엄청난 자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왔다. 이런 지휘관이 한국군에도 없기를 바라는 바이며, 그 무능함의 대가는 무엇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테러범들은 그날 새벽 5시 가자지구 전역의 미리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여 로켓 추진수류탄(RPG), 기관총, 소총, 폭발물 같은 탄약·무기를 집어 들었다. 이들은 최상위 지휘관부터 소대-분대-이웃-친구-친척에게 직접 구두로 전달하는 ‘귓속말 통신(Chinese whispers)’으로 방대한 이스라엘의 최첨단 감시 네트워크를

피할 수 있었다. IDF는 감시병의 육안 감시보다 기술적 감시에 더 많이 의존했다. 그러나 하마스의 드론이 폭발물을 떨어뜨려 통신타워를 파괴하자, 셀룰러 통신이 끊긴 IDF는 장님 신세가 되었다. 나중에 하마스 대원들의 시신에서 발견된 매뉴얼에는 소규모 부대별 고유 지침과 세부임무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방어부대 편성 및 매복, IDF 증원부대 및 도로 차단, 이동 간 공중위협 저지, 인질 납치 및 지하터널로의 이동 방법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당일 하마스가 제일 멀리 돌파한 곳은 가자지구에서 동쪽으로 14마일 떨어진 오파킴(Ofakim) 마을이었지만, 당초 계획에 의하면 이보다 훨씬 남쪽으로 진출할 예정이었다. 테러공격이 시작된 지 6시간이 지난 낮 12시52분이 되어서야 IDF가 현장에 도착했다. 오전 내내 계획을 실행에 옮긴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은 최대 300명의 이스라엘 군인을 포함하여 1,200명을 살해하고, 240명 이상을 인질로 납치했다. 그날 이스라엘을 덮친 하마스 무장대원 규모는 약 3,000여명으로 추산한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드론에 대한 방어 대책을 다양한 수준에서 구축하고 있다. 몇 가지 대표적인 방어 대책에는 탐지기술, 대응무기, 사이버 방어, 국경 감시와 경계 기지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이스라엘은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구 조식을 통해 경고 및 대피 시스템을 운영하고,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아이덴티티를 파악하여 반격하는 등 다양한 방어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만약에 북한이 하마스처럼 드론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도발 시나리오를 예측해 보았다.

가. 북한의 드론 기술 평가 : 북한은 최근 드론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의 드론 기술 수준은 여전히 선진 국가들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북한의 공격 목표 : 북한의 드론 공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떤 목표를 공격하고자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군사 시설, 핵 발전소, 주요 도시, 핵무기 보유 국가 등이 잠재적인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북한의 공격 의도 평가 : 북한의 드론이 공격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자원과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북한이 드론을 대규모로 생산 가능한지, 드론 조종자 및 유지보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공격 의도를 분석하여 드론 공격이 전술적인 목적인지, 사이버 공격을 보조하기 위한 부수적인 수단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라. 위협 평가 : 북한의 드론 공격은 국가 안보에 상당한 위협을 안고 있을 수 있으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자폭드론에 탑재된 폭발물이나 화학 물질로 인한 공격 등에 대한 위협을 평가해야 한다.

마. 대응 및 대비책 평가 : 북한의 드론 공격에 대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응 방안

을 평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북한의 드론 공격에 대비하는 훈련과 군수 자산의 보호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과 정보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북한의 드론 공격 가능성을 평가하고, 대응 및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동향은 불확실하므로 지속적인 정보 수집 및 평가를 통해 대응 전략을 유지하여야 한다.

북한의 드론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도입해야만 한다.

1. 드론 탐지 시스템 강화 : 주요 경계 지역에 드론 탐지 시스템을 설치하여 드론의 기체 및 통신 신호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조기 경보를 발생시켜 미리 대비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랜드레이더나 적외선 기술을 개발하여 드론의 탐지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2. 대응용 드론 이용 : 자체적으로 대응용 드론을 개발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드론을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대응용 드론은 신속하고 정확한 탐지 단계를 거쳐 적절한 대응 수단을 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3. 사이버 보안 강화 : 드론이 주로 원격 조종되므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침투를 막는 방화벽 및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여 불법적인 드론 조종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법률 및 규제 강화 : 드론 침입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률과 규제를 도입하여 불법적인 드론 발사 및 조종을 방지해야 한다. 불법 드론의 선박, 항공기 또는 기밀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반입되는 드론에 대한 검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협력과 정보 공유 강화 : 국내 및 국제적인 기관과의 협력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드론 침공에 대한 통찰력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외 개인 및 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국가 간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드론은 전·후방 구별없이 날아 올 수 있고, 민간인과 군인 구별없이 무차별적으로 자폭할 수 있는 가공력은 상상을 초월하기에 정보 공유 통해서 선제 대응할 대응체계 구축이 반드시 조기에 전력화 되도록 대드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위의 대응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북한의 드론 침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국토의 안전과 국가의 보안을 확보할 수 있다. 필자와 생성형 AI인 Chat-GPT와 공동으로 교감하며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기에 향군 지면을 통해서 다시한번 어려운 국방 환경 속에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는 군으로서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강군 육성과 더불어 책임 국방을 달성하기를 당부 드린다.

# 한국 병역제도에 관한 단상

홍 성 표

(군사문제연구원)

인구 감소에 따라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므로 그에 대응하여 한국군의 전체 병력을 감축해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발상 자체부터가 낮 놓고 1자도 모르는 자들이다. 총인구 2,500만 명의 북한은 총병력 128만 명을 유지하면서도 군복무를 10년씩 하고 있지만 군소리 한마디 없이 잘도 버티고 있건만, 인구 5,200만 명의 대한민국은 70만 명의 군대를 50만 명으로 감축하면서 복무기간도 20개월 전후로 단축했는데도 병력을 더 줄여야 한다고들 하고 있으니, 오늘의 대한민국 국방현실이 안타깝다.

5,200만 명 인구의 대한민국이 그래 고작 50만 명 군대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더 줄여야 한다고? 개중에는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인 것도 모자라, 12개월 복무한다는 독일 사례를 떠들며 다니는 몰상식한 자들도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단축을 원한다면서..... 국민들이 원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나라 망칠 자들 아닌가. 적들이 쳐들어와 산하를 통째로 불살라버려도 일신의 안일만을 추구하면서 안주할 자들이다.

모름지기 위대했던 국가지도자들은 나라가 있어야 나도 있음을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다. 플라톤이 그러했고, 공자도, 우리의 전국대통령 이승만도 국권의 중요성을 힘주어 역설했다. 동서고금의 수많은 선현들은 國泰民安을 강조하며 富國強兵을 추구했던 것이다. 크고 작은 분쟁으로 얼룩진 인류역사가 이를 뼈저리게 깨우쳐주었기 때문이다. 로마군의 침공으로 마사다 고지까지 쫓겨 갔던 이스라엘 군병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곳에서 최후의 1인까지 싸우다가 전멸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라가 없었던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나 학살당하면서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일제 치하에서 국권을 잃었던 우리 민족도 하마터면 일제에 병합될 뻔했다가 외세의 도움으로 겨우 민족자존의 독립국가로 거듭나게 되었다. 국권을 잃고 약육강식의 국제무대에서 수난당한 사례들은 이 이외에도 얼마든지 있다. 3천만 명에 이르는 쿠르드족은 나라를 세우지 못하였기에 오늘도 터르키예, 이란, 이라크로 3분되어 온갖 멸시와 천대 속에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우리가 체득해야 할 살아 있는 교훈이다.

한국군을 50만 명 이하로 더 줄여서는 안 된다. 호시탐탐 무력통일을 노리는 북한군 대비 절반도 못되는 병력이기 때문이다. 일이 터지면 아무리 좋은 첨단 무기장비라도 그것을 운용해야 할 병사들의 손길이 하나라도 아쉬운데, 적의 절반도 안 되는 병력을 어떻게 더 줄이자는 것인가.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로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식의 체념적 주장과 아무런 외부 위협도 없는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여 군대를 최소화 하려는 시도도 안된다. 그들의 안보환경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분단국가이고, 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 획책하고 있다.

모름지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국가지도부라면, 설혹 국민들이 다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병력감축을 포함한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시도라면, 결단코 동조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 대중들이 원한다고 나라의 장래까지 포퓰리즘 시류에 영합하며 따라가서야 되겠는가. 진실한 국민들은 국가지도부가 이 같은 포퓰리즘 시류를 냉철하게 거부하면서 부국강병을 위한 병역제도를 결정해 나아가는 통 큰 결단력을 보여주기를 고대한다.

최근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나라 위한 결단력으로 세계적 비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의 과단성 있는 리더십을 되새겨보게 된다. 그는 국내외의 빗발치는 비난 여론과 정전 압박에도 불구하고 하마스를 뿌리 뽑을 때까지는 이 무자비한 전쟁을 결단코 멈추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만천하에 공표했다. 이는 1982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무장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서야 가혹한 군사작전을 종료했던 베긴 수상과 매우 흡사한 애국적 결단의 리더십이다. 내외부의 그 어떤 압력과 시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미래 안보만을 생각하며 강력한 리더십으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제거한 선각자 베긴 수상의 결단력이 있었기에 그 후 지난 40여 년간 이스라엘은 큰 외환 없이 국가안보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는 국가지도부라면 안일함을 추구하는 대중들의 여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더라도 이 같은 포퓰리즘 시류는 단호하게 배격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통 큰 결단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설혹 당대에는 알팍한 시류의 희생양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월이 지날수록 국민들은 그 국가를 위한 결단력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왜 국가지도부는 나라 망칠 군복무기간 단축이나 병력감축은 더 이상 안 된다는 진실한 애국적 국방캠페인을 벌이지 않는가!

오늘날 군복무에 대한 젊은이들의 자긍심은 그야말로 바닥 아래 수준이다. 국가 방위를 위한 인센티브가 대부분 사탕발림 수준이고 입대하는 젊은이들에게 제공하는

국가차원의 배려 또한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부국강병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보다 근원적인 동기부여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단기 복무 장병들에게는 복무 후 취업경쟁에서 당연히 가점을 주어 국방헌신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주고, 복무기간 현실화로 최소한 2년을 기준으로 하되 형평성 차원에서 육해공군간 갭을 줄이며, 급여도 외국인 노동자 수준이 아니고 우리 사회 수준에 걸맞게 체계적으로 인상하여 전역시엔 누구나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병력감축 우려를 능히 극복하고도 남은 자원들이 군문으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겠는가.

나라를 위한 헌신을 최고로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이기에 절대다수 국민들은 이 같은 정책을 우선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분단국가를 엄중하게 이끌고 있는 국가지도부가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병역제도를 부국강병 백년대계에 부합토록 결단력 있게 계도해 나아가길 기원한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 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02)499-0201/korvass0201@naver.com